

작은정부의 에너지정책

金 乾 治

〈석유협회 홍보이사〉

새 정권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동력자원부가 폐지되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은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조장해야 하는 개방화·자율화시대를 맞아 정부의 기능을 명령이나 지도로부터 자율로 바꾸고, 과감하게 조직의 군살을 빼내 행정의 비능율을 제거하고 보완하는 행정개혁이 새 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동자부의 폐지로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요구되는 에너지정책기능의 약화 내지 실종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동자부가 상공부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에너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산업경쟁력 강화가 최대과제인 산업정책에 밀려 회생될 가능성이 많다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은 기본성격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와같이 상충되는 두 정책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통상부처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경제는 물론 행정효율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의 현안과제에 밀리다 보면 에너지정책이 그 그늘에 묻혀 소홀히 취급되거나 처리·집행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의 보조적 부수적 위치로 약화될 경우, 그동안 겨우 기틀을 잡아 가던 에너지소비절약기조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며, 이는 국내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래에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개발과정에서 에너지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 와중에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일치(컨센서스)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소요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는 100%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증가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우선정책에 밀려 저유가정책을 지속해온 결과이다.

동자부의 폐지는 에너지정책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관련업계에도 심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의 위상 약화는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의 투자우선순위 후퇴로 안정공급기반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며, 만성적인 정유업계의 저수익성 경영구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유산업은 현재 1차에

에너지정책은 다양성 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기능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포괄성과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한다.

너지공급의 61.7%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방대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수적인데, 향후 정책집행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배려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동자부 폐지이유에 대해 『동자부가 석유수급문제 해결이라는 설치 당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지난 1978년 동자부 발족 당시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큰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中東지역의 政情불안에 따른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문제등 새로운 차원의 환경·에너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 국내 에너지소비가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지난 1969년의 69.3%에서 1992년에는 93.7%로 늘어났고, 또 올해에는 94.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 에너지공급시설의 확충과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지속적 추진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금세기의 마지막 연대이며 21세기를 바라보는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제3의 석유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고도산업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추구등으로부터 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과제의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정책의 수용, 담당,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이용과 관련되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 공해문제, 입지선정에 따른 국토이용관리 문제등은 에너지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숙명적 과제인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정책은 총자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범주내에서 경제 사회적 목적의 가치에 따라 이용되는 자원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에너지개발·생산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경제의 총자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범주내에서 그 목표와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고, 정책의 운용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수급정책, 투자정책, 유통정책, 절약정책, 자원개발정책, 환경정책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수단의 특성에 따라서는 가격 및 조세정책, 재정투융자 및 자금지원정책, 규제정책, 비축정책, 기금관리정책, 대외협력정책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정책들은 기능상 각기 특성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행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도 거시적 에너지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정책은 다양성 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기능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포괄성과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간여하게 되는 시장의 범위가 에너지부문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건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며 또한 에너지자원시장구조의 성격이 특수하다는 데 기인되고 있다.

'90년대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분명 새로운 도전의 시대이다. 환경 및 입지문제의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하며, 국제화 지방화 복지화등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이에 부합되게 에너지정책은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전문성의 심도를 깊게 하여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복합에너지시대로 전개될 '90년대의 에너지정책의 성패는 21세기의 우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에너지문제는 어느 한 시대의 특정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구촌 그리고 후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동자부 폐지 이후 에너지정책이 약화되고 소홀해져 향후 예상되는 위기시에禍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